

우리나라 발전 원동력의 핵심

우리 경제는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과소비에 흥청거리고
임금인상은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의 열쇠」인데도
국가기능에서 과학기술을 제거한
경제기획은 무엇을 남겼는가,
콩을 썰줄만 알았지
씨를 뿌리는 작업이 멎어 있으니
새로운 경제개발로 21세기의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하고
무엇인가 개선해야 하겠다.



金 燦 喆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어느 학자는 사면초가가 아니라 심면초가라고 규정짓고 있다. 세계는 소련붕괴 이후 급변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화에 대응하여 WTO 등 큰 바람을 몰아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시들어 가고 있는데도 과소비에 흥청거리고 임금인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쓰러지고 있고, 아무도 생산적인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엔진 꺼져버린 국가발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70년대의 경이로운 발전을 놓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다. 여러 의견들 중에서도 우리의 우수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우리 기업인들의 성취욕 및 특히 후진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강력한 국가의 지도력이 주효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사라져 가고, 이제는 엔진이 꺼진 차가 고갯길에서 오던 관성을 잃고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고개를 오르고 있는데 말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무엇부터 풀어가야 되는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시작은 그러한 경험이 많았던 외국 전문가들이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움으로써 시작되었다. 제3차부터는

계획 자체를 우리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고 보아야 옳겠다.

70년대에는 아직 국내에 재원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대일청구권 자금을 위시하여 외자만이 거의 유일한 재원이었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과 외자도입 배분 등이 동원되어 원하는 사업과 원하는 공업화로 유도할 수 있었다. 이 외자도입권과 오늘날 예산실로 대표되는 예산권과 경제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로서의 격상, 이러한 것들이 경제기획처에 부여되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직접 그 날 그 날 보좌할 수 있는 자리에 돈을 맡는 경제 1수석과 기술과 기획을 맡는 경제 2수석을 두어 지휘했었다.

그리하여 경제 2수석은 상당한 물의를 낳으면서도 온 나라의 공업단지이며 그 많은 공장들은 물론, 그 당시 국방과 연계되어 가장 어렵고 시급했던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하나 하나 챙겨 공업구조를 개편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의 우리 산업의 힘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경제 2수석으로 가장 유명했던 오원철(吳源哲)씨는 기술관료 출신으로서 기획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였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KIST 등에서 (그 당시 아직 한국 사정에 익숙하지도 않은) 해외유치 과학자들을 동원하였던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가 기술의 속성을 잘 아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경제 2수석은 각론을, 그것도 핵심

되는 가치를, 틀림없이 챙겨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의 성취가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느 것이 핵심이 되는 가지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 핵심을 몰랐으면 전체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라진 과학기술비서관

나뭇가지는 고사하고 나무도 채가지 못하고 숲만 보는 식의 총론경제의 방법으로는 그 당시의 경제가 풀리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오늘날의 경제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경제의 '열쇠'라 하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 2수석의 자리가 매우 약화되었고, 6공에 들어와서 명맥을 겨우 유지하던, 드디어 6공 말에 와서는 없어져 버렸다. (5공 처음에 있었던 과학기술비서관의 취향과 노력으로 전자교환기와 집적회로의 국산화를 이룩하여 산업을 키운 것은 가상할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 버렸고 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 이후에는 이 비서관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과학기술처 또한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관련 문제란 그때 그때 변하는 것이고, 이에 적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경제가 미래를 열어야 할 열쇠 없이 10년을 경과하다 보니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오늘날의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더욱이 80년대 초부터는 기득권이 강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게 불간섭을 강하게 주장했고, 경제학도와 경제계 출신이 압도적인 경제기획원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드디어는 민간경제, 자율경제라는 슬로건에 모든 국민들의

거부감도 또한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철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의 문호개방 압력이 더욱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우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면 기업에 맡겨진 우리 경제는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가? 과학기술을 국가 기능에서 제거한 경제기획은 무엇을 남겼는가? 교과서적인 경제원론에 의한 문호개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와 같이 아직 개발도상의 과정에 있는 나라에서는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약한 우리 기업을 외국의 강한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자라나는 새로운 싹-기업을 낳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국가의 힘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돈만 따진다면 쌀도 외국에서 사서 먹는 것이 훨씬 쌀 것이다. 부품, 소재 등도 계속 외국에서 사 오고 외국 회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 내맡겨진다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그 생활터를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활터를 새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즉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3공화국에서는 '잘 살아 보자' 하여 모든 노력을 경제에, 그리고 그 힘을 온통 몰아서 경제기획원에 주었다. 그러던 것이 5공에 들어와서는 다 같이 잘 살아 보자'로 바뀌었고, 6공 이후에는 깨끗하게 살자는 것이 점진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남북통일이라든가 노사문제, 경제블록화 문제와 같은 문제는 늘 나오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더욱 더 환경, 안전, 복지 등이 강조되고, 교육, 과학,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의의가 달라질 것이다. 국가 경영의 시각이 진작 바뀌었어야 했었던 것이다. 경제기획원을 바꾸든지 총리실에 흡수하여 상공, 건설, 교통, 체신, 환

경, 안전, 노동, 에너지, 농업, 경제 및 특히 과학기술 등의 복합기능을 갖는 「국가기획원」으로 바꾸고, 해당 전문분야의 학도 내지는 관료들에게 끌고루 또는 교대로 국가기획을 맡겨야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작업 시급

특히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을 담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자들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근대사회를 이끄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요소이다. 독일, 일본, 대만 등 건실한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라들과 공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고위직에서 많은 과학기술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그 국가운영 체제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동원하는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과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땅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언제 무슨 씨를 어디에 뿌려야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그 열매가 다른 누구의 것에 비해서도 훨씬 좋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땅과 계절을 기능하여 오늘도 내일도 씨 뿌리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각론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Specialist)여야 씨를 틀림없이 미리 뿌릴 줄 아는 법이다. 경제의 씨뿌리는 작업이 멎으니 처음에는 탄력에 의해서 한참 굴러갔지만 중국에는 경제의 엔진이 멎을 수밖에! 지금의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21세기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 뛰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는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⑤7